

국감 달군 ‘초이노믹스’...與 “우려” 野 “철회”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

농해수위, ‘세월호 국감’ 이준석 선장 등 불참 따져 법사위,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원칙싸고 공방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야심찬 확장적 경제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16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초이노믹스를 ‘빛잔치’,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인위적 경기 부양의 위험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며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의원 재직시절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금산분리와 경기부양책에 대한 입장이 계속 바뀐 점 등을 지적하며 “(최 부총리가) 얼마나 경제철학이 없는지 보이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도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께 계속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감에는 증인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세월호 선원 7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4명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일반 증인들을 상대로 세월호 안에 승객들이 남아있는 데도 구조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123정 이생준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123정 정장인 김경일 씨가 “승객을 못봐서 구조하지 못했을만큼 구조 요청한 사람들은 다 구조했다”며 “안전만 확보됐으면 (세월호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하

자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격양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신정호 의원은 “퇴선 명령도 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했다고까지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은 “의원들과 상의해 증인 불참자들에게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 수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위법적 발생을 통해 국민 생활을 불법 검열하려 한다”며 파상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만큼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에 달라”며 방어에 나섰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감자료를 부실 제출하고 있다며 국감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안 장산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 등 주영순 의원, 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

동북호 수질 관리 중재도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신안군 장산 위험도로 확포장 사업과 무안군 무안생태갯벌전시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안군 장산면 두루메~호리간 도로는 폭이 2m 미만으로 차량의 교차 통행이 불가능하고, 특히 커브 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농번기 농기계와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주 의원이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해 시작했으며, 올해도 특별교부금 5억원이 확보되면서 잔



여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안갯벌은 2011년 5월 전국 최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갯벌생태전시관이 개관됐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기존 농어촌도로를 사용하는 등 불편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4일 영산강유역 관리청장으로부터 하수와 담양, 광주시가 서로 관리를 하지 못해 수질이 악화된 동북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중재를 이끌어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檢 사이버 사찰 국정 조사 검토” 우윤근 새정치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연일 밝혀지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인간 존엄과 자유, 사상,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관해 “법률적으로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며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 검열과 감시를 피하려는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최경환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객관적 지표가 연일 나온다”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을 내리고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부담이 더 가중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당내 IT(테크포스)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1등 항해사 국감 증언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강원식 1등 항해사가 증언대에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위, “누리과정 따져야...” 황우여 장관 호출 공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회의 초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호출해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3시간 가량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에서 편성하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국정감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교부금을 추가 편성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증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옛날 어른들이 먹는 것과 애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보육정책이 시작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누리과정(이)점에만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27일 종합감사에서 어차피 쟁점이 될 사안인 만큼 그때 따지는 게 맞다”고 맞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소속 실천 위원장은 “사안 자체가 돌발적이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당장 교육장관이 와서 상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맞다고 본다”면서 여야 간사 한 장관 추과 일정을 협의할 것을 지시하고 11시에 정회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인 의료정보 435만건 檢·警에 제공”

김용의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의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예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김 의원은 “건보 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 2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경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며 “공단은 계좌추적이나 감청과 달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김성수씨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우윤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근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김성수 전 원내대표 정부조정실장을 임명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 신임 대변인은 뉴스데스크 앵커와 목포MBC 사장을 거쳐 지난 5월 박영선 전 원내대표에 의



해 정부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또 새정치연합은 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득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석행 전 위원장과 박태원 전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공동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흙 받습니다!

공사명
국도1호선 무안 청계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토사반입시기
공고기재일 ~ 2014년 11월 20일

반입장소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지내

반입가능지역
무안군 청계면 인근

토사 주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시공사 : (주) 중해건설
연락처 : 061)452 - 6588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강평가보다 20% 값싸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01 부동산 담보대출	02 햇살론대출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04 자영업자, 직영인 전문직 신용대출
최저 3.5%~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청원자금 최고 5천만원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간편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이마트, 주매, 삼기, 공강, 내대지, 원통, 전.담, 모뎀	대출자격: 신용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최저 4.0%~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대출자격: 자영업자 및 직영인, 전문직
대출한도: 최고 80%까지(신용등급)	대출한도: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상환방법: 일시상환 (미리소득통장 가산)	대출한도: 최고 1억원
상환방법: 상환비 면제 / 대출유대	대출기간: 최고 5년	구비서류: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호본 각 1통	대출금리: 최저 5.0%~
구비서류: 통기관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호본 각 1통	대출금리: 연 8.01% (이체연동결제)	인감도장, 신분증	상환방법: 대환 대출자 관리 추가 인하
보 증 료: 대출금의 0.95%(사영업자), 0.90%(근로자)			

정기예탁금

1년	18개월	3년
2.85%	2.9%	2.9%

수시 입출금 통장

최대 2.5%

단, 하루를 맡겨도 일한예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정기적금

1년	2년	3년
3.1%	3.2%	3.3%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전남여고 구도형 밀려오리

대인상업 대인마을소 대인광장 유동

대인본점. 223-8007
223-7251

총장지점

구도형 총파

우리은행 연리국당

상상생명 광주신교

유동 누운동

총장지점. 223-7217
223-7218